

|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개최 |

본위원회 정상화 전까지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이끌기로

위원 전면 개편 등 경사노위 정상화 방안 공감대

이세종 전문위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7.26.(금) 17:30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약칭 6인 회의)'를 개최하고 '연금개혁특위' 등 중단됐던 기존 의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또한 조속한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해 본위원회 위원 구성을 전면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6인 회의'는 지난 7.22.(월) 제8차 운영위원회에서 노·사·정의 의견이 모아져 성사됐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를 해결하고자 출범했던 사회적 대화가 멈출 수 있다는 안팎의 위기의식이 노사정 6인 대표를 한자리에 모은 것이다.

'6인 회의'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 부총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구성됐고,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간사 자격으로 참여했다.

이날 첫 '6인 회의'에서는 크게 네 가지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우선 사회적 대화가 본위원회 의결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데 공감했다. 4월에 종료된 연금개혁 특위와 7월에 종료된 사회안전망위원회 등 4개 의제별위원회의 논의를 공식적인 본위원회 의



결에 앞서 재개하도록 했다. 핵심 신규 의제를 다룰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와 버스, 보건의료, 공공부문의 현안을 논의할 업종별위원회도 대화를 우선 시작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각 회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은 향후 본위원회가 개최되면 승계하기로 했다.

다음으로는 본위원회 위원에 대한 전면 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면 개편에 대한 공감대는 지난 운영위원회 이후 ‘6인 회의’ 개최 전까지 본위원회 위원들 간에 형성되었다. 본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계속된 본위원회 파행의 책임을 일부 위원들에게 돌리기보다는 위원 전체가 지는 것이 맞다는 인식이 강했다. 그 바탕 위에 경사노위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필두로 공익위원 4명, 경영계 대표 3명 등 총 9명은 사퇴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사실상 당연직인 한국노총 위원장과 한국경총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퇴가 무의미한 까닭에 사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노동계 계층대표 3인에 대해서는 동반 사퇴를 요청했지만, 끝내 거부했다. 문성현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조만간 9명의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와 함께 사퇴를 거부한 노동계 계층대표 3인에 대한 해촉을 건의하기로 했다.

셋째, 본위원회 파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경사노위법도 손을 보기로 했다. 입법상 흠결로 지적돼온 해촉 규정의 신설과 재적위원 2/3 참석 외에 노사단체 대표 1/2이상 참석 등 협의구조에 맞지 않는 엄격한 의결 정족수가 주요 대상으로 논의됐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지만, 반대로 소수가 전체 사회적 대화를 중단시킬 수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넷째, 노·사·정의 공동 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의견 교환도 있었다. 경사노위에서 이루어진 3개의 합의안이 국회 입법 논의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고, 국내의 양극화와 일자리 상황, 일본 수출 규제 등 대내외적 위기와 악재에 대한 공감 속에 격차 해소,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관계와 경쟁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한 것이 그것이다.

회의를 주재한 문성현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아닌 ‘6인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지속해야 하는 현 상황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다”며, “과도기적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6인 회의’가 시작된 만큼 노사정 대표들은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방안 모색과 추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참석한 노사정 대표들도 한 목소리로 “5개월여 동안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의 실망감과 안타까움이 크다”며,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조속한 사회적 대화 정상화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

회의 종료 후 문성현 위원장은 박태주 상임위원과 함께 이날 회의 결과 관련 출입 기사를 대상으로 기자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발표 자료 전문이다.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결과 발표 자료

지난해 노사정 대표자들은 시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그 뜻을 모아 11월 22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출범 3개월여 만에 의제별위원회에서 3개 합의*를 이뤄내는 성과를 거뒀지만, '탄력근로제 개선 합의(안)'을 반대하는 계층 대표 3인의 수차례에 걸친 본위원회 불참**으로 최종 의결을 성사시키지 못했습니다. 또한 탄력근로제에 대한 국회 처리마저도 불발되면서 본위원회 개최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 3개 합의문: ▲디지털 전환에 대한 노사정 기본인식과 정책과제에 관한 기본 합의문('19.2.18.), ▲탄력근로제 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19.2.19.),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등에 관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19.3.5.)

** 본위원회 일자: 제2차('19.3.7.)-제3차('19.3.11.)-제4차('19.4.26.서면) 의결 무산, 제5차('19.7.4.) 일정 연기

본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연금개혁특위' 등 기존 회의체의 운영시한* 연장은 불가능해지고, 신규 의제·업종별위원회 발족도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19.4.29.),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7.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7.16.),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7.16),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7.19.)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불합리한 격차가 없는 나라'를 만드는 데, 견인차가 되어야 할 사회적 대화가 멈출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제8차 운영위원회(7.22.)는 현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가 형식을 떠나 실질적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약칭 6인회의)*'를 구성·운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6인회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

이에 따라 7.26. 오늘 1차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사노위 6인 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는 중단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는 제도적 틀 내에서의 사회적 대화가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하여 과도기적으로 사회적 대화 전반의 운영과 방향에 대해 논의·결정하고, 활동시한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로 한다.

운영시한이 종료된 「국민연금개혁과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 「산업안전보

건위원회],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디지털전환과노동의미래위원회」는 논의를 재개한다.

「양극화해소와고용+위원회», 「버스운수산업위원회», 「보건의료산업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는 새로 설치하여 대화를 시작하고 향후 본위원회 개최 시 이를 승계한다.

최종 의결하지 못한 3개 합의(안)은 차기 본위원회 개최 시 의결을 추진키로 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에 합의(안)이 반영되도록 공동 노력한다.

또한 6인 대표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격차와 양극화, 지역의 산업 및 고용위기, 그리고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등 대내외적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경사노위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해 격차 해소, 지역 사회적 대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핵심 부품소재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협력적 대·중소기업 및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한편, 위원회는 노사정 대표자들의 의견을 들어 본위원회 위원 재구성 등 전면개편을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사회적 대화가 원활하지 못해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회적 대화에 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019. 7. 26.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는 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 노동계 계층별 3인에 대한 해촉이 가능한가? 법적 문제는 없는가?

▶ 위원장

해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경우의 일반적인 관례는 위촉권자인 대통령께서 해촉을 할

수 있다는 법률 전문가들의 검토와 자문을 받은 바 있다.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서 대통령께 해촉을 건의할 예정이다.

○ 해촉 건의의 시점은 언제인가요?

▶ 위원장

다른 주체들과 상의해서 적절한 날짜를 잡아야 할 것이다. 아마 다음주 중에는 건의를 드릴 것 같다.

○ 위원장과 상임위원의 사퇴 사유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을 의결시키지 못한 책임인가?

▶ 위원장

본위원회가 파행이 된 원인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안의 처리문제가 직접적인 원인이다. 다만, 계층별 3인에게만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 아니냐는 생각이 공감대를 이뤘다. 한국노총, 한국경총 등 사실상 당연직도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리적으로 의미가 없어서 제외된 바 있다.

○ 위원회를 정상화하는 방법이 이것밖에는 없는 것인가?

▶ 위원장

현 상황을 돌파하는 데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노사정 주체들이 의견을 같이했다.

○ 공동 사퇴를 하시는 데 사퇴서를 받았나?

▶ 위원장

저와 상임위원을 포함해서 전원 사퇴의사를 밝히고 입원 중인 중기중앙회 회장을 제외하고 사퇴서를 제출했다. 노동계 계층대표 3명 빼고는 다 냈다.